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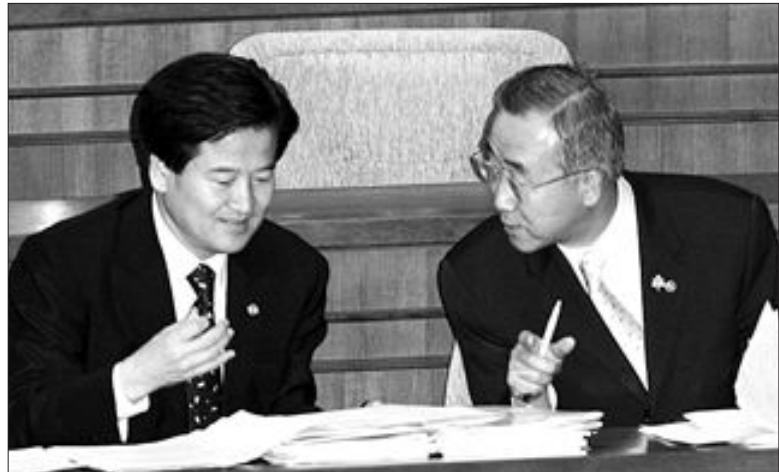
통일·외교·안보분야

“북핵대처 혼선…NSC 쇄신해야”

野 “동북아균형자론 한미동맹에 악영향”
정부 “북핵실험 근거 없어…언론의 추측”

국회는 8일 이례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고 북한 핵문제, 한미정상회담,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북핵 인식에 안이하고 시스템을 무시한 정부의 정책 혼선이 외교안보 정책에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전면적 쇄신 및 동북아 균형자론 폐기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NSC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외교 안보 분야가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현 상태를 위기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북핵에 핵심점이 압박했다는 확인된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면서 “(핵실험을 하려면) 여러 장

비와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런 증거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이어 “북핵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아시아 핵질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고, 동북아 평화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면 한반도 위협에 대한 인식은 새롭게 해야 하고, 남북 간 정책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변 문제에 대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면서 “올 것이나 안 올 것이냐의 판단보다는 공적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최근 국적포기자의 공직자 부모 사퇴 논란과 관련, “인권, 법률적 차원에서 가능하자는 점에서 법적, 인권적 차원에서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통일장관은 지난 98년 파키스탄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설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머리를 맞대고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숙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 대해 “확인된 바 전혀 없다”면서 “언론이 쓴 것을 정부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NSC 무용론 주장에 대해 “협의 조정 기구로서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전략적 유연성의 기본 개념은 이해하지만 한반도 안보의 위협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하는데 있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기문 외교장관은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이견설에 대해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해 (한미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국 입장에서 미국 등 여러 나라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어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또 “한미동맹은 최근 중요한 전환기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동맹개리 분담문제, 동맹의 추구 방향,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등에서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작전계획 5030’을 아십니까?”

〈북한 고사작전〉

군사적 충돌 발발전 지역사령관에 작전권 허용
자원 고갈·군부 동요 유발→北 정권 붕괴 유도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의 8일 대정부질문에선 ‘작전계획 5030’이라는 낯선 군사용어가 등장, 눈길을 끌었다.
이해한 총리도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으로부터 “작계 5030에 대해 들어봤느냐”는 질문을 받고 “들어왔으나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로 생소한 개념이다.
지금까지 한반도 군사활동과 관련돼 공개된 미국의 작전계획은 작계 5026, 5027, 5029 등이다. 5030은 이같은 작전계획의 시리얼 넘버의 마지막에 위치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작계 5027(O-plan 5027)로, 한반도의 전면전 상황을 전제로 한 전쟁시나리오다. 지난 74년 처음 작성된 뒤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왔다.
한나라당 박진(朴振)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군사전문지인 ‘글로벌 시큐리티’를 인용, “작계 5027은 전면 남침을 기도하는 북한군을 휴전선 남쪽 20~30km에서 한국군이 저지하

면 그 사이 미군이 증원돼 반격을 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작계 5026(O-plan 5026)은 지난 94년 제1차 북핵 위기시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초정밀 공습(surgical strike)을 가해줄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시설 등 전략목표를 F-15E, F-117, B-1B, B-52H 등 전폭기나 폭격기, 토마호크 순양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 선제공격으로 정밀타격한다는 계획이다.
작계 5029는 전면전이 아닌 북한군의 급변 사태시 군사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측이 작전계획으로 추진하다가 한국의 주권침해 문제가 제기돼 한국 정부의 반대로 중단된 뒤 최근 한미양국이 ‘개념계획’ 수준으로 합의한 계획이다.
‘작계 5030’은 일종의 ‘북한 고사작전’으로도 불리는 작전개념으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토머스 파고 태평양사령관과 미 국방부 작전 담당관들이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 5030’의 핵심은 군사적 충돌 발발전에 작전권을 쥐고 있는 지역사령관에게 김정일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저강도 작전을 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군 통수권자의 승인없이도 가능한 사전작전은 북한의 제한된 자원을 고갈시키고 군부의 동요를 유도해 김정일 정권이 붕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된다는.
일례로 작계 5030 초안은 R-135 정찰기를 북한영공에 근접비행시켜 북한 전투기들의 잦은 출격을 유도함으로써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보유 연료를 소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군이 사전 예고없이 기습적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수주간 지속되는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대비태세를 갖추게 함으로써 식량 등 전시대비 비축자원을 소진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교란과 허위정보 유포 등 전통적인 작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전술작전을 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티오피아 테그비리다 공업대학 학생들이 7일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일바스 맥시코광장에서 폭동진압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에티오피아, 시위대에 발포 20명 사망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중심부에서 보안군이 돌을 던지며 총성 부정성거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발포해 적어도 20명이 숨졌다고 에티오피아 인권위원회가 밝혔다.
이날 발포는 특수부대 병력이 현장에 도착한 뒤 시작됐으나 증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총격을 가했는지 아니면 경찰이 발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인권위원회 아베베 테레페 사무총장은 이날 총동료 2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아디스아바바=AP, 로이터연합뉴스

北, 6자회담 재개 신중 행보

한·미정상회담 지켜본 뒤 북귀시점 언급할 듯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미국과의 접촉에서 6자회담에 북귀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언론매체들은 8일 오후 4시 현재까지 북·미 뉴욕접촉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그렇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취해온 태도를 고려할 때 6자회담의 효용성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입장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그동안 줄곧 요구해 온 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과 명분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북한 외무성이 8일 ‘북핵 문제 유연성’ 등을 거론한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을 맹비난 하면서 “6자회담 재개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회담재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할 데 대한 우리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한 데서 이같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6자회담 자체를 부정할 적이 한 번도 없다. 오히려 북한은 6자회담을 북측이 제안한 회담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입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상회담을 지켜본 후 미국의 태도변화와 ‘주권국가 인정’의 진의를 평가하면서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주한 美·日대사 내정자 프로필/

동서·유럽안보 정통 직업외교관

美 버시바우 공석인 주한미대사에 단수추천된 것으로 알려진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러시아 미국 대사는 보스턴 출신으로 미국무부내 동서관계와 유럽안보 문제에 정통한 직업 외교관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그는 1994~97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대통령 특별보좌관 겸 유럽담당 선임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나토 확장의 틀을 만들었으며, 옛유고 내전 이후의 지역내 각종 갈등 문제, 미-유럽관계 등에서 수완을 발휘해 윌리엄 코언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조셉 J. 크루텔 평화상을 받은 적이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 과정에서 리처드 홀부르크 보스니아 담당 특사의 보좌관으로서 보스니아 내전 종식을 위한 데이턴 평화협상에 관여했던 전임 주한미 대사였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두터운 친분을 쌓았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버시바우 대사의 단수추천 보도가 맞다면 이는 한미관계를 통상적인 수준에서 다뤄서는 안되며 한미관계를 한층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인선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색된 한일관계 풀어줄 경제통

일본 주한 일본대사로 내정된 오시마 쇼타로(大島正太郎) 외무성 사찰담당(재외공관감사) 대사는 경제국장, 경제담당 외무성의관(차관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의장 등을 역임하는 등 외무성 내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최고대관인 도쿄대 법대를 졸업한 오시마 내정자는 이 뿐 아니라 외무성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러시아와 미국 주재 공사와 주재내 일본 대표부 대사를 역임하는 등 오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다.
다카노 대사의 ‘독도는 일본땅’ 발언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현재 대사가 교체된다는 데서 일각에서는 분위기 반전을 카드로 보고 있다.
오시마 내정자는 주재내 일본 대표부 대사 시절 “전시 위안부 관련 문제를 비롯, 2차 세계대전으로 야기된 보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으며 이 문제들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법적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해 국내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으나 위안부와 관련한 도덕적 책임을 거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광주아울렛 2살 생일 한턱 내겠습니다. LYLE & SCOTT 전구매고객에게 사은품 증정 (행사상품제외) 라일앤스코트 T.384-2940

공시최고 2005.9.20. 14: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05년 6월 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권기만